광주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사실상 원점 회귀

검찰, 삼거동 후보지 위장전입 8명 기소
市, 기존 입지 선정 절차 무효 수순
2030년 직매립 금지 대응도 차질 우려

검찰이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면서 선정 절차가 사실상 무효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이 이날 소각장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12명 가운데 위장전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8명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4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 후보지는 주민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삼거동 후보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가운데 48세대가 사업에 동의해 최소 신청 자격 요건인 50%를 넘기면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검경 수사에서 동의 세대 가운데 12세대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동의 세대는 36세대(40%)로 줄어 최소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이에 기존 입지 선정 절차와 후보지 결정은 무효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을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져 지난해 9월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광주시는 삼거동 후보지의 자격 상실 여부와 후속 절차를 검토한 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입지 선정 방식과 관련해 재공모나 직접 후보지 지정 등의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입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정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 내 시설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당초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친 뒤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2027년 설계·착공을 거쳐 2030년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현재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기간이 2031년까지인 만큼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검찰 기소 판단에 따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삼거동 후보지 자격 상실 처리 문제와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은 "향후 입지 선정 방식을 재공모로 할지, 직접 후보지를 지정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지만 우선은 삼거동 후보지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 판단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지, 법원 판단 이후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과 관련해선 "SRF 운영기간이 2031년까지인 만큼 2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203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변은진 기자

부정선거 의혹 해소 선거장비 시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7일 앞둔 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관위에서 공정선거참관단들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선거장비 시연을 보고 있다. /김애리 기자

민형배 후보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 10일 출범

시민주권 등 3개 선대위 운영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오는 10일 오후 3시 광주 민심캠프 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로 공식 명칭을 확정한 이번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가 참석해 민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선대위는 시민주권선대위·미래도약선대위·원팀선대위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전문가그룹이 전남광주 대통합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정책을 현장에서 검증·환류하는 '사발통문'형 구조로 설계됐다.

'시민주권선대위'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권자 중심의 통합특별시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미래도약선대위'는 AI·에너지·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주도한다.

'원팀선대위'는 광주와 전남 전 지역 시민이 하나로 뭉쳐 압도적 승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선대위 인선은 정계·학계·시민사회를 두루 아우르는 '실용과 통합 진용'으로 꾸려졌다.

후원회장에는 이광재 경기도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와 정성택 전 전남대학교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가 선임됐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박지원·정준호 의원을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손금주·서동용 전 국회의원과 김승휘 경선대책위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선거 '도박 의혹' 공방 가열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7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예비후보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불법 카지노 공간에 발을 들여놓고도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김대중 후보의 해명은 시도민들의 상식에 대한 모독"이라며 "도박장 출입 사실 만으로도 교육자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며, 자신의 해명에 대해 '직'을 걸고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김 예비후보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 도박 프레임 씌우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박 의혹'은 교육감 선거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는 명백한 흠집내기이자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며 "해외 출장 중 방문했던 곳은 숙소 호텔의 부대시설로 이를 마치 불법적인 도박장을 드나든 것처럼 묘사하고 교육감 후보를 '타짜'로 매도하는 것은 도를 넘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국외 출장 중 일과 이후 일행들과 호텔 카지노 방문 사실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선관위, 무소속·교육감 후보 추천장 검인·교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지방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를 대상으로 9-15일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을 경우 해당 추천은 무효 처리된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 추천은 가능하다.

/변은진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